



2007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



2007 일반용

통일교육지침서

Contents



2007

I. 통일교육의 목표 7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3

1. 통일문제의 이해 15

- 가. 통일문제의 성격 | 15
-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 17
- 다. 통일의 필요성 | 19
- 라. 통일의 과정 | 21
-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 22

2. 북한 이해 25

- 가. 북한에 대한 인식 | 25
- 나. 북한의 정치·외교 | 27
- 다. 북한의 군사 | 32

- 라. 북한의 경제 | 33
- 마. 북한의 사회·문화 | 36
-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 42

3. 통일환경의 이해 45

- 가. 국제정세의 변화 | 45
-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 48

4.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현황 50

- 가. 우리의 통일방안 | 50
-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노력 | 52
- 다.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 55

5. 통일을 위한 과제 59

Ⅲ.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63

- 가.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 65
- 나.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 66
- 다.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 67
-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 67
- 마.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 68
-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 69
- 사.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 70

Contents

〈부록〉

현장 통일교육 안내 | 75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 83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85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 88

I

통일교육의 목표

1. 통일문제의 이해 _ 15
2. 북한 이해 _ 25
3. 통일환경의 이해 _ 45
4.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현황 _ 50
5. 통일을 위한 과제 _ 59

I

통일교육의 목표

통일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과 태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통일교육지원법 제2조).

통일교육의 목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밖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천명한 우리나라 헌법전문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4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다음의 세부적 목표들을 추구한다.

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을 토대로 한 통일관 정립

우리의 헌법이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주력한다.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는 구성원 각자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 사회

적 포용과 배려, 남북한 사이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통일과정에서는 물론 통일이후에도 일관되게 추구해야 할 기본가치이다.

한편, 통일한국이라는 정치공동체의 핵심적 토대가 민족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장시간의 분단 상황 속에서 형성된 남북한간의 이질감을 극복하며 통일한국에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순조롭게 뿌리내리도록 하는 토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미래지향적 통일관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선순환적 구조를 이루는 안정적이고 형평적인 정치공동체로서의 통일한국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민족공동체 의식이 상호 조화롭게 융해될 수 있는 열린 마음의 통일관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의 함양

통일교육은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명의식을 신장시키고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회의 역량을 제고하는 데 주력한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간 상호 대립과 소모적 경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산가족문제 등 민족적 비극이 지속되고 있으며 민족의 역량과 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낭비되고 있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분단은 우리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 요인이며 막대한 규모의 분단비용을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시킨다. 통일 한국의 달성은 민족의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확장시키며 민족의 번영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

하는데 이바지함을 강조한다.

통일은 맹목적인 의지의 표출만으로 성취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통일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적 통일로, 이는 민족상쟁의 비극이 다시금 이 땅에서 되풀이될 수 없다는 우리 사회의 일치된 자각과 동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이해 시킨다.

또한, 우리 사회내의 다양한 가치관과 견해를 상호존중과 이해를 통해 조화해나감으로써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역량을 모아가야 함을 강조한다.

남북한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확대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남북한의 공동번영을 지향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노력이자 역량 제고 방안임을 일깨운다.

다. 통일환경의 객관적 이해와 건전한 안보관 확립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와 한반도의 안보상황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에는 국력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통일교육은 변화하는 통일환경의 현주소 및 미래 추세,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적 과제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북한 실상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안목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편, 국제적 안보환경의 변화,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황, 북한의 핵문제 등 여러 가지 안보위협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가번영과 남북관계 발전의 초석으로서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II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_ 15
2. 북한 이해 _ 25
3. 통일환경의 이해 _ 45
4.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현황 _ 50
5. 통일을 위한 과제 _ 59

Ⅱ

통일교육의 내용체계

1. 통일문제의 이해

가. 통일문제의 성격

통일문제는 민족 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성을 지닌다.

한반도는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미·소의 분할점령으로 인해 지리적으로 양분되었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6·25전쟁을 겪으면서 남북한이 상호 증오심과 적개심을 확대하는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었다.

분단 이후 남북한간 첨예한 대립과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주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동북아의 국제정치적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같은 이유로 한반도의 통일문제는 우리 민족의 내부적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특성을 보유하게 되었다.

통일문제의 이중적 특성은 한반도의 평화번영 및 통일이 남북한간의 주도적 해결 노력과 더불어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우리가 통일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

해서는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주지하도록 한다.

통일문제는 남북한과 주변국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결해나간다.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주변국의 관심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주변국가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바라고 있지만, 주변국가들의 경우 각기 한반도의 통일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 통일이 역사적 당위성을 띠고 있으며, 주변국의 실리에 부합됨을 주변 국가들에게 이해시켜 그들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결국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남북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문제의 이중성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이 우리 민족의 결집된 노력과 함께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통해 가능함을 인식시킨다.

나. 분단의 배경과 폐해

(1) 분단의 배경

통일을 왜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이를 것인가를 논의하려면, 먼저 현재의 남북분단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와 뒤이은 미·소의 한반도 분할점령으로 지리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남북분단의 기원은 서구열강의 세계 분할지배와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통치로 소급될 수 있다. 이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1945년 8월 15일 연합군측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자,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였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분할된 한반도는 미·소간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면서 지리적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남북이 각각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졌다.

1945년 12월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미·영·소가 한반도 신탁통치를 결의하자 우익 자유주의 진영과 좌익 공산주의 진영은 신탁통치의 찬반 여부로 갈려 상호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1948년 남과 북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정부를 각기 수립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정치적 분단이 초래되었다.

6·25전쟁으로 심리적 분단이 심화되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발생한 6·25전쟁은 민족구성원 상호 간에 깊은 상처와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심리적 분단으로 이어져 한반도 분단이 심화·고착화되었다.

(2) 분단의 폐해

분단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정신적·물질적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민족적 차원에서는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공동번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단은 대륙으로 통하는 통로를 단절함으로써 남한을 지리적 폐쇄공간으로 만들었다.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남한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으로 인해 대륙과의 육로 통행이 차단됨으로써 총체적 사회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받고 있다.

분단은 남북한간 적대적 대결구도를 지속시킴으로써 평화와 번영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기회를 제약해 왔다.

분단은 남북한간 소모적인 군비경쟁 등을 유발시켜 경제발전에도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

또한 분단은 수많은 이산가족들과 남북여류자 가족들에게 혈육과 이별한 채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분단이 초래한 남북한의 적대적 대결구도는 한반도의 평화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안정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한반도 분단이 국제적 요인과 민족 내부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과정도 민족공조와 국제사회의 지지 및 협력 확보라는 이중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인식시킨다.

분단의 장기화가 개인의 삶과 민족 전체의 발전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 영향과 폐해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준다.

다.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분단으로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민족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현시킨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서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60여년간 분단은 민족 구성원간 상호불신, 반목 및 갈등을 부추기며 민족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 국가의 실현은 우리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재결집시키며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추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통일은 남북 이산가족 등 분단으로 인해 생이별을 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해소한다.

분단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남북으로 갈려 있는 이산가족들이다. 남북 간 분단 상황에서 장기간 교류와 왕래가 두절된 채 고통 받고 있는 이산가족들에게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중차대한 과제이다.

통일은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창출하고 한반도를 동북아 번영의 중심국가로 이끈다.

통일은 한반도에 단일경제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내수시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보완성을 높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남북이 통합된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시아의 번영을 주도할 것이다.

통일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해소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불안한 정세는 남북한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불안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분단의 폐해를 환기시키고 통일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가져다 줄 편익은 무엇인가를 이해시킴으로써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킨다.

라. 통일의 과정

통일은 남북간 상호 이해,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정착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룩해야 할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통일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민족생존 및 번영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남북간 이질감을 고려할 때 그것을 단기간에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이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의 지평을 넓힘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협력을 통해 분단 상황을 평화적·통일지향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이를 바탕으로 남북간 정치적 신뢰가 구축될 때 한반도의 평화공존은 자연스럽게 이룩될 수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경제교류를 넘어서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교류협력 분야가 다양화될 때 남북간 평화공존은 안정적인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통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이와 함께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 화해협력 기조 및 단계적 통일방안 등에 대해 우리 사회 내에 일치된 합의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통일의 제반 이슈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자유로운 논의의 장을 제공하면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이끌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동북아 주변국들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 외부 조건이다. 남북한간 상호 안보위협을 축소 등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구하는 동시에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간 경제력 격차, 체제의 차이와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당장의 통일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음을 이해시킨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도 점진적·단계적 통일이 필수적이며 남북간의 상호협력과 공존 공영의 관계가 중요함을 인지시킨다.

마. 통일국가의 미래상

통일한국은 남북한 구성원간의 이질감이 해소되고 모든 이들이 통일의 결실을 공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족공동체를 실현한다.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정치적 이념의 차이, 경제력의 격차, 사회·문화적 가치 및 관습의 차이 등 다양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통일국가는 이러한 격차와 이질감을 해소하기 위한 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하나의 조화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한국은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구성원이 통일의 결실을 공유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지향할 것이다.

통일한국은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와 복지를 보장하는 선진복지국가를 구현한다.

통일국가는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가 존중되며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이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 총체적 역량이 발현된 선진경제를 기반으로 풍요의 혜택이 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국가가 구축될 것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국가를 지향한다.

통일은 아시아 대륙 및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열린 공간의 시대를 한 민족에게 제공할 것이므로 통일한국은 21세기의 동북아시대를 선도하며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주도적 국가가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구성원들은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활동영역의 확대와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향유한다.

통일한국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전쟁의 위협제거에 따른 군사비 감소,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상호보완적 활용 등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인구 8천만명 수준의 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이 고양될 것이다.

또한, 통일국회의 구성원 개개인은 보다 개방된 공간을 배경으로 거주, 여행, 결혼, 직업 등 삶의 다양한 분야에서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고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국가의 실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도록 한다.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개인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그려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떤 노력 등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2. 북한 이해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기초로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실상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해야 한다.

가.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은 통일을 위한 화해협력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다.

분단이 해소되기까지 북한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만들어 갈 동반자이자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까지 대결의 상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북한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구조의 남북한 현실을 경시하는 통일지상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인식한 가운데 서로간의 적대인식을 감소시키고 동포애를 발휘하여 북한을 공존공영의 동반자 관계로 이끌어가는 지혜와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다.

분단이후 남북한은 서로 이질적인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법적·체제적으로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다른 점들이 존재한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객관적

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사회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는 단순히 드러난 현상을 파악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들이 어떻게 야기됐는지에 대한 북한 사회의 전반적인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확한 자료와 정보에 바탕을 두고 북한사회 전반에 대한 종합적·균형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실천적 차원에서 볼 때 북한에 대한 이해는 남북한 주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을 이해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출 수 있는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이나 가치관등 그들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을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은 통일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경계의 대상이라는 이중성을 이해시키고,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사회 전반을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북한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며, 남북한이 상호 편견과 차별의식을 극복하고 공존공영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나. 북한의 정치·외교

(1)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치체제

북한의 통치체제는 수령과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전 사회가 일원적으로 편제된 유일지배체제이다.

북한체제는 ‘수령의 사상 즉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유일지배체제이다.

유일지배체제는 권력이 지도자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령을 중심으로 사회전체가 일원적으로 재구성되며 이를 합리화시키는 이론적 기반(혁명적 수령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대가정론)과 사회적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실천적 기반(일인 절대 권력체제, 사회동원체제, 개인숭배 등)을 가지고 있다.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이론들은 지도자를 ‘인민대중의 최고 뇌수’, ‘사회정치적 생명을 부여해주는 아버지’로서 규정하고 북한주민에게 절대 복종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 및 개인 숭배를 통해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지도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주어진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 우위의 지배체제로서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이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 권력과 이들의 혁명사상인 주체

사상에 의해 지배되는 독특한 체제이나 이와 동시에 집단적 소유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당이 모든 권력의 원천을 이루는 당-국가체제로서 당은 혁명의 참모부이며 전 사회를 영도한다. 북한에서 당이 이런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당이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조직이며 혁명의 핵심역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은 모든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으나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모든 정책을 집행하는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이다.

김정일 집권 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우면서 군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당 우위의 국가지배체제는 김정일 집권이후 군 중심의 위기관리체제로 변화한다. 북한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과 대외고립 등의 체제위기상황에서 군대를 내세워 체제의 균열과 붕괴를 막고자 선군정치를 구현하는 한편 새로운 통치구호인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사상과 선군사상 등을 표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대는 국가보위와 경제건설, 혁명적 군인정신의 사회적 확산 등 국가전반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강성대국건설의 주력군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정치체제는 김일성-김정일의 절대권력과 주체사상에 지배되는 독특성과 당-국가의 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이해시킨다.

김정일 집권이후 선군정치를 앞세운 체제운영의 특징을 김일성시대와 비교하여 변화와 지속성이라는 관점에서 규명하도록 한다.

(2) 북한의 대외정책

탈냉전이후 북한의 대외정책은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와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한 외교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냉전시기 북한은 체제유지와 한반도 공산화 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여건조성을 목표로 외교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탈냉전이후에는 체제의 안정성과 지속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체제안정성 확보와 경제난 해소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면서 일본과 관계진전 및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으로 국제고립을 탈피하고 대외경제협력의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유럽연합(EU) 국가들과 수교하고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관계개선에 나서는 한편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 강화 등 다자주의 외교노선을 취

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 개발을 통한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실리외교를 추진하면서도 체제유지와 안전보장을 위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등 공세적인 외교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지원과 체제보장을 위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핵개발 계획시인,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강행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탈냉전이후 대미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측의 보상차원에서의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인식되면 핵 재처리 위협, 핵 연료봉 봉인중단 위협, 미사일 발사 등의 전략을 구사하여 양국의 관계가 주기적으로 중단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위기를 조성하는 벼랑끝 전술은 1999년 9월 북미간 대북 경제제재 완화와 장거리 미사일시험발사 유예를 맞교환하는 베를린합의에 도달하는 한편 2000년 북·미 양국대표단의 상호방문으로 북미관계가 대전환을 맞기도 하였다.

북한은 대미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대미관계 개선이 경제적으로 서방국가와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지원의 물꼬를 트는데 관건이 될 뿐 아니라 체제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강행 등으로 맞서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등 대결과 협상을 오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중국, 러시아와 우호관계 증진을 통해 대미견제와 체제보장을 기하려는 북한의 균형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전통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미국의 압박정책을 견제하려는 균형전략을 추진하면서 이들 국가로부터 경제·외교 등 다방면의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시대와 달리 중·러 양국과 미국의 관계는 경쟁·대결 관계이면서도 경제적인 협력과 교류를 진행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균형외교 전략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사일발사,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 위기를 조장하는 전략에 반대하면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탈냉전이후 북한은 경제회생과 체제보장을 위해 실리외교를 추진하는 한편, 핵과 미사일개발처럼 공세적인 외교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관계의 현실과 북한 특유의 외교전략을 평가한 후 그것이 통일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생각하게 한다.

다. 북한의 군사

북한은 체제유지와 대외협상을 위한 도구로서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북한의 군은 조선노동당의 혁명무력으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방 및 경제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북한은 현재 117만 명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구의 약 30%를 예비병력으로 동원하는 등 병력보유율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경제력의 상당부분을 군사비로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휴전이후 무기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군수공장을 건설하는 등 군수산업의 발전에 치중해 왔다. 그 결과 일부 전자 및 정밀유도 무기, 고도의 항공장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등 각종 전략무기를 개발 배치하여 독자적인 전쟁수행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들어 악화된 경제사정은 전투력 향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 즉, 각급 군사훈련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수품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장비의 현대화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군사력의 전진배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대남 군사우위 및 대미협상에서의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은 자위국방의 원칙에 의해 군수산업의 발전에 주력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등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안보위협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라.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경제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분단 이후 현재까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과 중공업 우선의 군산(軍産)복합체 경제운용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 자력갱생의 발전전략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의 모순이 누적되면서 경제침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북한경제는 내각에서 관리하는 민수경제(제1경제)와 군부에서 관리하는 군수경제(제2경제)로 구분되어 있다. 국가경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군수경제가 자원배분에서 최우선시 되기 때문에 민수경제 부문은 발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에너지 부족과 식량난으로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경제는 에너지난, 식량난, 외화난 등 심각한 경제문제를 겪고 있다. 원자재 및 에너지난으로 북한의 많은 공장·기업소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극심한 식량난으로 북한주민에 대한 식량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자구노력에 힘입어 1999년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중요한 생산요소의 조달이 경제난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시행하고 개성·금강산 특구를 지정·운영하는 등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제한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를 발표하여 경제관리 방식에서 효율성 및 수익성에 기초한 실리주의에 중점을 두고, 생산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즉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노무관리 개선, 개인 경작지 확대, 식량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축소·폐지, 가격·임금의 대폭 인상, 환율 조정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03년에는 종합시장을 공식적인 상품유통망으로 허용하였으며, 이후 종합시장은 북한주민의 생활터전으로 자리잡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으로 공식 공급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이후부터 ‘장마당’을 통해 대부분의 생필품을 조달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지정 발표하고, 2002년 10월과 11월에는 금강산관광 활성화 및 남한 기업의 전용공단 조성을 위해 금

강산과 개성을 특구로 지정하였다.

북한은 향후 내부적인 경제개혁과 함께 제한적인 대외개방 및 남북경협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7.1조치 이후 북한경제는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으나, 물가상승, 빈부격차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북핵문제로 인해 악화된 대외환경속에서 내부적으로 체제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시장 촉진과 억제의 경제정책을 교차적으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식량난·에너지난 해소, 공장 개건·현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외화와 원자재 확보를 위해 선택적 혹은 제한적으로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남북경협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경제의 기본구조인 사회주의계획경제와 기본노선인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중공업 우선의 군산복합체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것이 지닌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한다.

북한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및 개성·금강산 등 개혁·개방조치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마. 북한의 사회·문화

(1)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생활

북한주민의 규범적 가치관은 평등주의와 집단주의이다.

북한은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체제로서 토지·자본·공장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해 왔으며,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등 북한주민들에 대해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강조해왔다. 또한 헌법 제63조에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북한주민은 자신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가치관을 배양해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주민의 가치관은 사회주의적·집단주의적 가치관에서 개인주의적·자본주의적 성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후 중앙당국의 배급이 중단됨에 따라 자신이 생계를 꾸려가면서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 주민들은 기업소나 협동농장보다 장마당 개인장사나 텃밭 개인농사에 더욱 열성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점차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있고, 동지애와 의리보다는 금전적 인간관계가 우선시되고 있으며, 돈을 중시하는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남한사회와 문화에 대한 거부감도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주민은 북한당국에 의한 사상교양학습을 통해 남한주민을 ‘혈벗고 굶주린 불쌍한 동포’ 혹은 ‘미제의 압제에 시달리는 해방의 대상’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 사회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대북지원이 지속되면서 문화적 거부감이 줄어들고 있으며, 함께 살아갈 대상 혹은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난 이후 생계활동에 따른 사회이동과 정보소통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북한주민은 거주이전과 통행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국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경제난이후 생계활동을 위한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서 통행증 발급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고, 무허가 여행을 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등 주민의 사회이동이 활발해졌다.

또한 사회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정보유통이 활발해지고 남한사회를 비롯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북한주민의 의식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북한여성의 생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지위가 보다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남녀평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여성은 사회노동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이중노동과 가부장적 권위주의하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의 비중이 커지면서 남성위주의 가부장적 문화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정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높아지면서 북한여성들의 이혼청구 증가, 만혼, 결혼기피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주민의 가치관과 일상생활을 이해함으로써 상호 이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난 이후 가치관과 일상생활의 변화가 북한체제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탐색해보도록 한다.

(2) 북한의 교육과 학교생활

북한 교육의 목표는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육성이다.

북한의 교육목표는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즉 ‘주체형의 인간’ 을 육성하는 것이다.

주체형의 인간은 북한체제가 필요로 하는 구성원으로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을 제 1의 덕목으로 삼고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무장되어 집단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 있는 영웅이다.

북한 교육과정의 특징은 교육과 정치의 결합, 교육과 생산의 결합, 교육내용의 선택권 부재에서 찾을수 있다.

북한에서 교육은 사상혁명의 핵심적 수단으로 여겨지므로 학교에서도 정치사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 노동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은 생산에 필요한 실제 기술기능을 훈련하고 생산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국가에 의해 규격화되어 하달되므로 개인의 선택여지가 거의 없으며, 정해진 방향과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학교교육은 교과수업이외에도 청소년 조직활동과 방과후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 조직 활동은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체제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학생들은 소학교 2학년부터 소년단, 중학교 4학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하며, 이러한 조직은 학교생활과 일상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동료학생의 생활을 집단적으로 규율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방과후에는 개인별 선호를 반영하여 음악, 체육 등 소조(동아리)에서 활동하고, 학교에서 일을 하거나 농장에 나가서 일손을 돕기도 한다. 특히 우수한 실력과 재능을 갖춘 학생으로 선발되면 평양을 비롯하여 각 시·군에 있는 전문교육기관(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에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경제난 이후 북한은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컴퓨터, 외국어 등 실용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상적 이완현상을 막기 위해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발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특히, IT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90년대 후반부터 중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고, 컴퓨터 수재반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어 교육은 개혁,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과학기술이 강조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외국어 가운데 영어의 인기가 높아 대부분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의 교육목적, 교육제도, 교육내용을 이해하고, 우리와의 차이점과 공통점 비교, 최근의 변화내용을 파악한다.

북한의 학교생활을 파악함으로써 북한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킨다.

(3) 북한의 문화

북한의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우리 민족의 고유 전통문화에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명절은 전통적 민족명절 이외에도 김일성·김정일 생일, 정권수립일, 당창건일, 헌법절 등 북한체제의 특색과 사회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에는 경축분위기에 맞추어 평양과 지방의 모든 극장에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여는 것을 비롯하여 체육대회, 집회 등의 각종 행사들이 진행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사상교양의 수단으로 군중문화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군중문화 활동은 일반군중들이 참가하여 진행하는 문화활동으로 사상교양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연, 담화, 보고, 해설독보, 영화감상, 방송청취, 전시회 관람, 체육경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각급 학교나 기관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 예술인에 의한 ‘예술기동선전대’와 인민들이 참여하는 ‘예술소조’로 나누어진다.

북한주민은 여가활동으로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등을 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개인적 여가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실제로 북한주민은 노력동원, 회의, 생활총화 등 조직활동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규 일과 후에도 개인장사 등 부업으로 바쁘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대표적인 여가활동은 영화관람, TV시청, 노래, 장기, 주패놀이, 윷놀이 등이며, 낚시, 등산, 사냥 등을 즐기는 계층도 일부 있다.

TV드라마는 김일성주석의 가계와 항일혁명투쟁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내용도 많아지고 있으며, 남한 드라마를 시청하는 주민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명절이나 연휴에는 영화관람을 많이 하며, 북한에서 영화는 전파력이 크고 이동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문화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북한문화의 특성을 우리의 문화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통일 이후 남북한 문화통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보고, 개인적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행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바. 북한의 변화와 전망

북한은 경제위기 이후 체제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일련의 개혁·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난과 그에 따른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존전략 차원에서 점차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01년 이른바 ‘신사고’ 캠페인을 통해 의식전환, 기술개선, 산업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데 이어 2002년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

는 경제활동에서 분권화, 화폐화, 시장화를 의도하는 경제개혁정책으로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기능의 병존을 의도하고 있다. 그리고 종합시장을 공식적인 상품유통망으로 인정함으로써 제한적이거나 개인의 경제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1991년부터 나선경제무역지구를 개방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방지역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2002년에는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 그리고 신의주 행정특구를 설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률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 결과 신의주지역을 제외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시험장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대외개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대외개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2000년부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적극 개선·복원하였으며, 대외경제 확대정책의 일환으로 가공무역법, 저작권법 등을 채택하는 등 외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정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다양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대외경제 관련 법안들을 외자유치에 더욱 유리하도록 개정하고 있다.

북한의 제한적인 개혁·개방은 체제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은 완전한 개혁·개방을 할 경우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첫째는 주민통제의 문제로서, 북한 주민의 외부세계 접촉 확대 및 외부문화 유입 증대는 북한주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힘들게 할 것이다.

둘째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가능성으로서, 북한주민이 남한과 통일을 원할 경우 이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다.

셋째는 국제사회와의 관계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데, 북한지도부는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을 자신들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유지를 우선시하는 가운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시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 실태를 알아보고, 근본적인 개혁·개방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도록 지도한다.

개혁·개방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을 알아보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색해보도록 지도한다.

3. 통일환경의 이해

가. 국제정세의 변화

오늘날 국제사회는 냉전시대와는 매우 다른 형태의 새로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불안정 요인들에 직면하고 있다.

현대 세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자유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긍정적 변화의 이면에는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새로운 안보문제들이 국가와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국가간 무역장벽을 없애고 시장경제를 확대하는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각국은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세안(ASEAN)+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지역 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한편, 미·러 등 강대국간의 분쟁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냉전시대에는 잠재되어 있었던 종교·인종·민족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소규모 지역분쟁은 확대 추세이며, 테러·게릴라전·정보전과 같은 비전통적 형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는 한반도 통일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우리나라는 적대적 관계이던 소련 및 중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루는 등 구공산권 국가와 정치적·경제적·문화적·군사적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세계화의 조류가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적 상황에서 동북아는 이념적 대립의 지역에서 가시적 국익을 위한 국가간 경쟁과 협력의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경직된 외교적 동맹이 이완되면서 동북아의 국가간 교류와 협력관계도 점차 복잡해지는 추세를 나타낸다. 더 이상 적국이 아닌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류협력 범위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전반적 관계 개선은 우리의 통일환경에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9·11테러 이후의 변화된 국제적 안보환경은 핵무기와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면서 북미간의 관계 경색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한반도 통일환경에 부정적 역량을 초래하고 있다.

주변 4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사안별 협력과 경쟁을 병행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4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및 자국의 실리 도모를 위해 상호 경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미래구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견제하고 있다. 미·일간의 안보협

력에 대하여 중·러는 전략적 유대관계 강화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변 4국은 한반도의 급격한 상황변화 및 통일에 대비한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은 군사적 변환과 해외주둔군 재배치 계획 및 전략적 유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주력하는 한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 보다는 안정 선호의 정책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의 대한반도 정책 공조에 치중하는 한편, 대북 직접교섭의 가능성도 간헐적으로 타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극동지역 지하자원개발 등 남한과의 경협확대 노력과 과거 구소련 시절의 대북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대북외교를 병행하는 등 대한반도 실용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국제질서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문제가 동북아 및 국제 안보환경과 연계되어 있음을 주지시킨다.

한반도 통일에 대해 주변국들이 상이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이 해시킨다.

나. 통일환경 변화의 의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의 성격과 내용도 변화한다.

탈냉전과 9·11테러 등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는 주한미군 재배치, 한·미 동맹의 발전적 변화, 동북아 지역협력의 확대 등과 같은 다양한 과제들을 우리에게 제기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정세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과의 긴밀한 논의와 협력을 토대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한반도의 정치적·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등 우호적 통일환경의 조성을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는 현재의 통일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당면 이슈이다. 우리는 균형적이고 유연한 실용외교를 통해 주변 4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공동번영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화하는 통일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통일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한다. 사회주의 권의 몰락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유지를 위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경제개혁을 단행하고, 남한과 공존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또한 미국, 일본 등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의 개방 및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우호적 통일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변화된 통일환경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기회와 도전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지도한다.

주어진 통일환경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적 지혜가 필요함을 이해시킨다.

4.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현황

가. 우리의 통일방안

참여정부는 1989년 이후 보완·발전시켜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기초 위에서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남북연합단계」는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이다. 이 단계에서는 각기 대외적으로 주권을 유지하되 남북정상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각료회의, 남북공동사무처 등 공동의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통일국가 완성」 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체를 바탕으로 남북한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여 정치통합을 실현하는 단계로서 1민족 1국가 통일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 의회대표들에 의해 마련된 통일헌법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두 체제의 기구와 제도를 통합함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된다.

남과 북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서로의 통일방안이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북한은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처음으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공식 언급하였다. 북한이 제시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남북의 현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을 비롯한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 채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북한도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연합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우리의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 단계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를 밟는 것이 현실적이며 바람직한 경로임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우리의 통일방안을 북한의 통일방안, 특히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비교하고,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이해시킨다.

나. 역대 정부의 평화통일노력

1970년대 초 남북대화가 최초로 시작된 이래 정부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있다.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1971년 8월 우리 측의 제의에 따라 분단 26년 만에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최되면서 인도적 분야에서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이후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비공개 접촉과 방문을 통해 1972년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합의 문서인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 성명에서 남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에 합의하였다.

제4공화국 정부는 1973년 6월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1982년 1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발표하고, 2월에는 서울·평양간 도로 연결, 이산가족 편지교류 및 상봉, 설악산-금강산 자유관광지 개발 등을 포함한 20개항의 구체적 시범사업 실천을 제안하였다.

1984년 9월에는 우리측이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받아들이고, 11월에는 남북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일련의 회담이 성사되었으며, 1985년 9월에는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방문이 성사되었다.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7 선언' 을 통해 적극적 남북대화 추진 등 전향적인 북방정책을 도모하였다.

제6공화국 정부는 동구의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발맞추어 1989년 9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남북연합' 이라는 중간단계가 새로이 제안되어지고, 통일의 원칙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 의 3원칙이 제시되었다.

1990년 9월에는 남북한의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공식적인 남북고위급 회담이 개최되고, 이후 1992년 2월에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이 남북한 정부간에 채택되었다.

1993년 2월에 출범한 '문민정부' 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의지를 천명하는 등 적극적 대화를 모색하면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보다 발전시킨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을 1994년 8월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제1차 북핵위기가 야기되면서 남북관계는 위기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1994년에는 남북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이 추진되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무산되었다.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 는 적극적이고도 일관적인 '대북화해협력정책' 을 추진하였다.

'국민의 정부' 는 집권 초기부터 통일의 달성보다는 남북관계의 개선이 우

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현실적 시각에서 일명 햇볕정책이라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였다.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의 두 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다. ‘6·15 공동선언’은 통일문제, 이산가족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경제협력, 당국간 대화 및 김정일 위원장 답방 등에 대한 남북한간의 합의를 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남북 당국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등 대화가 진행되면서 남북한간의 실질적 문제들이 논의되고 실천방안들이 모색되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 건설, 이산가족 상봉, 부산 아시안게임 및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북측 선수단 참가 등 다방면에 걸쳐 남북간 교류협력이 크게 증대하였다.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들의 대북정책을 계승·발전시키며 통일, 외교 및 안보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증진과 남북한 및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구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 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② 상호신뢰 우선과 호혜주의, ③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한 국제협력, ④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의 취지 하에서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안보위기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화해·협력의 제도화,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 균형적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한·미동맹에 기초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도모하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한간 갈등과 적대의 구조 속에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역대정부의 대북정책과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이 해시킨다.

다. 남북교류협력의 현황

남북교류협력은 분단 이후 존속하는 남북한간의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 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우리 정부는 그간 다각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을 통해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북관계 개선을 선도하여 왔다.

(1) 개성공단 개발사업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개성시 및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총 2,000만평의 대지에 산업공단과 배후도시를 건설하는 것으로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1단계의 100만평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미 조성된 2만8천 평의 시범단지에는 15개 기업이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단계 사업

까지 완료될 경우 2천여개의 남한 기업이 진출하여 북한 인력 35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12월 현재 시범단지에서는 북측 11,190명과 우리측 900여명의 근로자가 함께 근무중이다.

(2) 금강산 관광사업

금강산 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해로관광의 형태로 시작하였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육로관광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시작 이래 2006년 12월까지 총130만명의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교류협력이 제한적이던 시절 시작된 대표적 사업으로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적 사업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

(3)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사업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 추진된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단절된 남북한 구간을 연결하는 것으로, 도로의 경우 이미 연결이 완료되어 매월 5천대의 차량과 3만명의 인원이 출입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궤도 부설은 완료되었으며, 역사와 각종 운영설비 등의 마무리 공사를 마치고 개통을 준비중이다.

(4) 교역의 확대

1989년 1,872만 달러 규모로 시작된 남북교역은 2005년에 10억 5천만불

에 달하면서 남북교역 1조원 시대를 열고 있다. 2006년의 경우 12월까지의 남북교역 규모는 13억 4,974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개성에 남북경협사무소를 개설하여 남북 기업간 직접 상담과 업무협의 등을 가능하게 하였다.

(5) 사회문화 교류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는 2000년도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양적으로 급격히 증대하는 추세이며, 내용면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방송, 학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이산가족교류의 경우 2000년 이후 2006년까지 14회의 대면상봉과 4회의 화상상봉을 통해 총 16,347명이 상봉했으며, 이외에도 39,217명의 생사확인과 679건의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6) 인도적 대북지원

정부와 민간단체는 경제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1995년 이래 지속하고 있다. 2006년 말까지 북한에 제공된 인도적 지원 총액은 2억8천만불로 이중 정부차원의 지원액이 2억만불이며, 나머지 8천만불은 민간차원의 지원액이다.

매년 식량·비료 등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2004년 용천재해, 2006년 수해지원 등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남북한간에 어떠한 교류협력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고, 교류협력이 어떻게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남북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사업이 궁극적으로 남북 경제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평화적 통일기반의 토대가 될 것임을 이해시킨다.

5. 통일을 위한 과제

통일을 평화적으로 달성하는 길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협력과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는 일이다.

남과 북은 오랜 냉전의 산물인 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우선 청산하고 화해 협력의 분위기속에서 인적·물적 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감으로써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을 공존 공영의 협력자로서 상호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남과 북은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스스로 국가안보를 확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의식과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민족동질성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통합은 큰 혼란과 후유증을 유발할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경제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전쟁으로 인한 적대의식과 문화, 사상적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통일이 되기 전부터 점차 좁혀 나가야만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적극 활성화함으로써 남북한의 두 지역경제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실현되는 기반들을 하나씩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북경협은 통일 이후 예상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사전에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들을 상호 보완케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상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경제적 역량을 높이게 된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오랜 분단으로 인해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한의 사회문화를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 접근시켜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사이에 다양한 사회문화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호 사회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동질성을 하나씩 키워나가는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 특유의 고유전통과 도덕관념은 문화적 동질감을 유지하고 제반 교류협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다.

통일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 이므로 우리는 모두 통일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통일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이해관계로 그치지 않고 개인적 차원의 이해로도 직결되는 것이므로,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임무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책임이자 권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곧 우리 자신의 개인문제이기도 함을 인식하고 통일의 피해를 줄이고 편익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동참하여야 한다.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 및 통일 이후에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 경제적·사회적 통일비용

을 자발적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통일실현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 민주시민의식 및 평화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통일은 남북간 체제통합이면서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통합이다. 지난 60여년 동안 가치관과 의식구조, 생활습관 등이 서로 다른 이질적인 체제속에서 살아왔던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는 동서독처럼 사회적 갈등과 문화적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평소 다른 사회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 ‘다름’을 배제하고 갈등의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자세로 관용하는 평화의식을 키워야 한다. 나아가서 ‘차이’에 의한 갈등을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 접근하며 민주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통일의 준비 차원에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새터민들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문화속에서 살아온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이 주제를 다룰 때의 강조점

통일의 전 과정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하고 통일의 이익을 국민 모두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완성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새터민들의 우리 사회의 정착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들을 이해하고, 정착하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다.

II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Ⅲ

사회통일교육의 지도방법

통일교육의 효과는 통일교육의 지도방법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도 방법은 교육수준의 적절한 설정, 내용전달의 효율적 방식 선택, 기자재의 활용 여부 등을 포함한다.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가 적절히 설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지도방법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되어 실시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도방법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가. 사실적 접근에 기초한 통일문제의 이해

사회통일교육은 통일문제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을 통해 학습자들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확보될 경우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수행할 것이며, 나아가서 해당 이슈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학습자의 편향된 가치체계, 왜곡된 이념 성향, 논리적 합리성의 결여 등은 객관적 사실의 제공에도 불구하고 오도된 판단과 태도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오해와 편견이 부정확한 사실의 보유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 사회통일교육의 핵심과제를 구성하는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들이 기존에 형성된 선입관에 근거하여 북한을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한사회와 주민생활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북한주민의 외형적 삶의 모습보다는 실제적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학습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학습자가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을 재확인시키는 교육을 수행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환경 및 통일정책과 관련해서도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학습자들의 균형적인 판단을 유도하는 핵심적 요건이 될 것이다.

나. 열린 대화와 토의의 중시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열린 대화와 토의 과정을 통해 타인 의사의 존중, 의사경청의 자세 습득, 협상능력의 확보, 합의도출의 역량 배양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요건들을 습득하게 된다. 통일은 합리적 토론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수렴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이루어 나가야 하므로 대화와 토의의 문화 정착은 통일의 선결 조건이 아닐 수 없다.

학습자들이 통일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에 의존하기보다는 열린 대화와 토의의 장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대화와 토의는 통일문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을 고취하고 자율적인 해결방안의 모

색 등 통일에 대한 학습자들의 능동적 자세를 견인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다. 생활관련 소재를 통한 흥미와 호기심 유도

교수자는 학습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소재를 중심으로 학습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나 소비 행태를 우리 사회와 비교하면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의 북한 사회의 변화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청소년의 문화생활이나 가정 내 남녀간의 역할 분담 등을 우리 사회와 비교하는 것도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흥미롭게 이끄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수자는 학습자로 하여금 통일이 그들의 실제적인 삶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통일문제의 논의를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수준에서 진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학습할 경우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불이익과 제약을 받고 있는가” 혹은 “통일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혜택과 이익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활용하며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 학습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은 학교통일교육과 달리 연령적, 집단적 다양성을 지닌다. 학습자중에는 6·25 전쟁을 경험한 세대도 있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도 존재한다. 교사, 공무원, 군인에서부터 일반 사기업의 직장인이나 주부에 이르기까지 직업별 특성도 차이를 보인다.

사회통일교육의 효율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학습자 집단의 특성에 맞추

는 교수 내용이나 기법 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학습자 집단의 연령별, 직능별 및 성별 가치와 사고의 정향성이나 지적 수준 등이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통일교육은 학습자의 전문성에 부응하는 특성화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특정 그룹에 대한 특정 통일분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교사들의 경우 북한의 교육제도, 북한 청소년의 생활상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 통일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이나 군인 혹은 일반 직장인의 경우도 직능별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관심을 촉진시키고 교육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마. 현안 쟁점과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

사회통일교육의 대상이 통일문제 전반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거나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교육 기법이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현안 쟁점이나 사례 중심의 통일문제 접근은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례 중심 교육의 경우, 남북화해협력의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는 방안은 포괄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좋은 범례학습이 될 수 있다. 분단국의 교류협력 및 통합 사례, 우리 역사상의 통일사례가 주는 시사점, 적대적 관계에서 화해협력의 관계로 이전한 인류역사상의 사례 등은 통일문제를 논의하

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활용

최근 통일교육에서 많이 활용되는 지도 기법들은 다음의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형 통일교육으로서 여기에는 게임, 퍼즐풀이, 퀴즈, 민속놀이 등이 포함된다.

둘째, 과제분담학습(Jigsaw), 보상중심협동학습(Teams Games Tournaments), PMR(Plus Minus Reconstruction), 이슈중심 접근법, 프로젝트수업, 신문활용교육(NIE : Newspaper in Education), 이야기 구연(Story-telling), 마인드맵(Mind map), 딜레마 토론 등을 포함하는 구성주의적 통일교육이 존재한다.

셋째, 북한 영화, 드라마, 예술 다큐멘터리 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 있다.

넷째, 북한 풍물, 인문지리 등의 가상체험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방법이 가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관 견학, 남북출입사무소 견학 등 현장체험학습을 활용하는 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섯째, 새터민의 초청강연이나 대담도 교육의 지루함을 완화하며 현실감

을 부여하는 통일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세미나 혹은 워크숍 등을 통한 통일교육도 강의식 교육의 단조로움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덟째,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통일교육방법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활용 통일교육이 있다. 여기에는 웹 자료, VOD, CD 등을 활용한 통일관련 정보 안내하기, 웹서핑, 웹도우미를 활용한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정보검색·분석하기, 웹토론을 통한 통일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능력 증대하기, 웹게시판을 활용한 통일관련 경험 공유하기, 웹출판을 활용한 통일신문 만들기,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생활문화 체험하기, 플래쉬 또는 동영상을 활용하는 통일교육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행사 등을 통일축제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사의 경우 가족 단위로 참석이 가능하여 통일에 대한 세대간, 성별 견해 등이 자유롭게 교환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사. 강의식 방법의 발전적 적용

강의식 교육은 학습자의 지식 필요 욕구와 교육자의 전문적 역량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 가장 효율적인 지식전달 방식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지식의 전달이 일방적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강의식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을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시키는 교육 기법이 가미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법으로는 시청각 자료의 활용, 브레인스토밍, 직소우(Jigsaw), 분임토의, 마인드맵(Mind map) 등이 존재한다.

부록

현장 통일교육 안내 _ 75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_ 83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_ 85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_ 88

현장 통일교육 안내

□ 도라산역(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도라산역은 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담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2년 2월 20일 미국 부시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여 북에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현재 남북 분단의 최접점에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21세기 철의 실크로드의 실제적인 시작점이라 하겠다. 남방한계선상의 남측 최북단 역인 관계로 향후 경의선 철도연결이 완료되어 남북왕래가 가능해질 경우 관세 및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역사성을 지니게 된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 555

* 민통선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까지 55.7km, 개성까지 14.2km, 평양까지 256km 떨어져 있음.

- 시설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700m²

2. 출입절차

- 모든 관광객은 임진강역에 하차하여 출입허가 절차 후 도라산역까지 운행하는 열차에 승차

- 임진강역~도라산역간은 지정된 열차로 출입하고 들어간 인원과 나오는 인원이 일치되어야 함.

● **출입인원** : 1회 300명(도라산역 방문 120명, 제3땅굴 연계관광 180명)

- 출입인원 제한에 따라 부득이 승차권 발매매수를 제한하므로 승차하는 역(서울역~문산역간 각역)에 승차권 구입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필요

□ **오두산통일전망대(홈페이지 : www.jmd.co.kr)**

1. 개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임진강과 한강의 하구에 위치하고 있다. 임진강(강폭 460m)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상호 마주하고 있다. 북한의 개성직할시 판문군 관산지역 주민의 농사짓는 모습, 군사 활동, 북녘의 산하, 북한의 각종 시설 등을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다. 전시자료는 물론, 최근의 북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상실도 갖추고 있다.

2. 관람안내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

● **관람시간**(국·공휴일에는 30분 연장됨. 기상조건에 따라 조정가능, 연중무휴)

- 4월~9월 : 오전 9시~오후 6시
- 3월, 10월~11월 :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 12월~2월 : 오전 9시~오후 5시

● 문의처 : (031)945-3171, 3173, 2390 팩스 : (031)945-3172

● 주요 전시내용

- 옥내 : 기획전시장, 북한전시실, 통일염원실, 북한영상실, 통일전시실
- 옥외 : 통일기원북, 평화의 상징탑, 망배단, 조만식 선생상 등

□ 판문점(홈페이지 : www.panmunjom.co.kr)

1. 개요

판문점은 서울에서 50km 떨어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에 위치해 있으며,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어진 곳이다. 현재는 남북회담 장소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으며, 국토분단과 동족간의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되새기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2. 관람안내

● 방문신청

- 일반인 · 공무원 · 정부초청 · 초청 외국인 등에 따라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제

출기일, 신원보증인 등이 다르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신청절차를 거쳐 신청

- 접수처 : 방문희망일 60일 전에 주소지 관할 국가정보원 대공상담소에 신청 및 문의

※ 중·고등학생, 교직원 : 관할 교육청 교육감이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에 신청

- 기타

- 약 90분소요(브리핑 30분, 견학 60분)
- 음주 및 주류 휴대금지
- 단정한 복장 착용
- 사정에 따라 방문일정 확정 후에 취소될 수 있음.

□ 도라전망대(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 위치 : 파주시 군내면 도라산리
- 규모 : 연건평 243평, 관람석 500석, VIP실, 상황실, 주차장(30~40대)
- 현황 : 송악산 OP 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이다. 전망가능지역은 개성의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변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암골(협동농장) 등이 있다.

2. 관광절차 및 신청

- **관광문의 및 출입신청(개인 및 단체)**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DMZ관광사업소(031-954-0303)

- **출입절차**

열차 이용시(1일 3회 운행)

- 출입신청 및 매표 → 열차탑승(임진강역) → 도라산역 → 셔틀버스 탑승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통일촌직판장 → 도라산역 → 열차탑승 → 임진강역

셔틀버스 이용시(약 30분 간격 운행, 약 2~3시간 소요)

- 출입신청 및 매표 → 셔틀버스 탑승(임진각) → 제3땅굴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통일촌직판장 → 임진각 관광지

□ 임진각관광지(홈페이지 : www.dmzpaju.com)

1. 개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사목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통일을 염원하는 통일안보관광지이다.

남북이산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는 한반도 모양의 ‘통일연못’, 한국전쟁 당시 포로들이 귀환시 이용한 ‘자유의 다리’, 판문점 일원에 중단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 ‘철마는 달리고 싶다’, 인류평화와 민족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지닌 ‘평화의 종’ 등이 있다.

2. 관람안내

- **관광안내** : 파주시청(031-940-4361~4)
임진각관광안내소(031-953-4744)
파주시시설관리공단(031-954-0025)

□ **통일관(홈페이지 : www.uniedu.go.kr)**

1. 개요

통일에 대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북한 실상을 올바르게 알리고, 북한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건전한 통일의식을 확산하고 통일의지를 고취시키며, 북한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각 지방에 통일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 관람안내

- **관람시간** : 동절기(11월~2월) 09:00~17:00

하절기(3월~10월) 09:00~18:00

- 관람시간은 각 지방 통일관의 현지 사정에 따라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있음.
- 월요일 또는 화요일 휴관하거나 연중무휴 개관

3. 지역별 위치 및 연락처

지역	위 치	전화번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236(자유회관 내)	(051)808-7960~3
광주광역시	광주 북구 운암동 164-1(중외공원 내)	(062)525-7722, 521-1700
강원 고성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8(통일전망대 내)	(033)682-0088
강원 철원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0-1(철의삼각전적관 내)	(033)455-3129, 3577
충북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70(우암어린이회관 내)	(043)256-5050, 252-1323
제 주 도	제주시 일도2동 968-29(탐라자유회관 내)	(064)751-0191~2
인천광역시	인천 남구 송의4동 8-7(수봉공원 자유회관 내)	(032)868-0113~5
강원 양구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후리 622(편치불지구 내)	(033)480-2674
오 두 산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59(오두산통일전망대 내)	(031)945-2390, 3171, 3173
경남 창원	경남 창원시 용지동 485번지(자유총연맹회관 내)	(055)282-2332~3
대전광역시	대전 유성구 도룡동 3-1(엑스포과학공원 내)	(042)866-5114~5

□ 통일부 북한자료센터(홈페이지 : unibook.unikorea.go.kr)

1. 개요

북한자료센터는 1989년 5월 22일 정부의 특수자료 공개정책에 의해 설치되었다. 여기에서는 일반 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북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확립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연건평 430평 규모에 문헌자료실, 정기간행물실, 시청각실, 북한TV 시청실로 구성되어 다양한 북한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영화상영, 북한실상 설명회를 정기·수시 개최하고, 1999년 10월 22일부터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통일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2. 이용안내

● 위치 및 교통편

- 주소 : 서울 종로구 서린동 154-1 광화문우체국(6층)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 지하철 : 1호선(종각역-6번 출구), 2호선(시청역-4번 출구), 5호선(광화문역-5번 출구)

● 이용시간

- 평 일 : 09:00~18:00
- 토요일 : 09:00~13:00(일요일, 공휴일 휴관)

● 문의 : (02)730-6658, 720-2429 팩스 : (02)725-5752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 목록

(06. 12. 31 현재, 92개 단체)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4	민족문화교류재단
2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25	민족통일중앙협의회
3	경실련 통일협회	26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4	교육복지연구원	27	부산여성회
5	굿네이버스	28	부천시민연합
6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29	북방문제연구소
7	남북농업발전협력민간연대	30	북한문제연구협의회
8	남북문화교류협회	31	북한연구소
9	남북문화통합교육원	32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10	남북사랑나누기협의회	33	새마을운동중앙회
11	남북사회문화연구소	34	서울시민문화단체연석회의
12	남북어린이어깨동무	35	세계평화여성연합
13	남북청소년교류연맹	36	세계평화청년연합
14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37	세계평화통일학회
15	남북청소년통일교육진흥원	38	수원여성회
16	다물민족연구소	39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17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40	안산통일포럼
18	대한YWCA연합회	41	여성사회교육원
19	대한기독교자유연맹	42	여성평화통일단체연합
20	대한민국팔각회	43	열린사회시민연합
21	대한불교청년회	44	영세중립통일협의회
22	동신대 동북아연구소	45	우리거래하나되기운동본부
23	동학민족통일회	46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연번	단체명	연번	단체명
47	원불교청년회 평화의 친구들	70	한거래통일문화재단
48	원주시민연대	71	한국YMCA전국연맹
49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72	한국가족문화원
50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73	한국걸스카우트연맹
51	정신개혁시민협의회	74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EYCK)
52	좋은벗들	75	한국대학원리연구회
53	천도교 청년회중앙본부	76	한국여성단체연합
54	통일건국민족회	7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5	통일교육문화원	78	한국자유총연맹
56	통일교육연구원	79	한국종교인평화회의
57	통일교육위원협의회	80	한국청년연합회(KYC)
58	통일맞이	81	한국통일교육학회
59	통일민주협의회	82	한국통일문화진흥회
60	통일시대 총북연대	83	한국통일여성협의회
61	통일안보교육협의회	84	한국통일진흥원
62	통일여성안보중앙회	85	한민족복지재단
63	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86	한민족운동지도자연합회
64	평화네트워크	87	한민족통일교육역사연구소
65	평화를만드는여성회	88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66	평화문제연구소	89	한민족통일촉진협회
67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90	한반도평화운동본부
68	평화통일복지협의회	91	화해평화통일교육전국모임
69	평화통일시민연대	92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웹사이트

□ 정부 및 공공기관

기관명	주소
청와대	www.cwd.go.kr
통일부	www.unikorea.go.kr
통일교육원(사이버통일교육센터)	www.uniedu.go.kr
남북회담사무국	dialogue.unikorea.go.kr
북한자료센터	unibook.unikorea.go.kr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reunion.unikorea.go.kr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www.acdpu.go.kr
국가정보원	www.nis.go.kr
교육인적자원부(인터넷평화학교)	tongil.moe.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국방부	www.mnd.go.kr
한국관광공사(북한관광정보)	www.travel-northkorea.com
파주시(DMZ파주안내)	www.dmzpaju.com

□ 연구기관

기관명	주소
통일연구원	www.kinu.or.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미래전략연구원	www.kifs.org
북한연구소	www.nkorea.or.kr
세종연구소	www.sejong.org
외교안보연구원	www.ifans.go.kr
평화문제연구소	www.ipa.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kdi.re.kr
한국교육개발원	www.kedi.re.kr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문화정책개발원	www.kctpi.re.kr
한국발전연구원	www.hanbal.com
현대경제연구원(북한정보뱅크)	www.nk-infobank.com

□ 민간단체

기 관 명	주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통일협회	www.ccej.or.kr/tongil
국제옥수수재단	www.icf.or.kr
남북나눔운동본부	www.sharing.net
남북문화통합교육원	www.togetherkorea.org
남북농업발전협력연대	www.potato.or.kr
남북어린이어깨동무	www.okedongmu.or.kr
내사랑경의선	www.kyonguisun.com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www.kcrc.or.kr
북한이탈주민후원회	www.dongposarang.or.kr
북한인권시민연합	www.nkhumanrights.or.kr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www.ksm.or.kr
좋은 벗들	www.jungto.org/gf
코리아스코프	www.koreascope.org
통일교육문화원	www.tongiledu.or.kr
통일교육협의회	www.tongiledu.org
통일정보센터	www.neopeace.net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www.koreahana.net
한국자유총연맹	www.kfl.or.kr

□ 언론기관

기 관 명	주 소
KBS(겨레가 하나되어)	news.kbs.co.kr/hana
KBS(아름다운 통일)	tongil.kbs.co.kr
KBS(북한 리포트)	www.kbs.co.kr/1tv/snwindow
MBC(통일전망대)	www.imbc.com/broad/tv/culture/unity/
SBS(북한뉴스)	news.sbs.co.kr/northkorea/news_northkorea_index.jhtml
이북5도신문사	www.ibukodo.co.kr
조선일보(NK조선)	nk.chosun.com
중앙일보(북한넷)	news.joins.com/nknet/
통일뉴스	www.tongilnews.com
통일정보신문	www.unityinfo.co.kr

□ 대학·대학원(연구소)

기 관 명	주 소
경남대학교(북한대학원, 극동문제연구소)	ifes.kyungnam.ac.kr
고려대학교(북한학과)	welove.korea.ac.kr/~nokor
관동대학교(북한학과)	www.kwandong.ac.kr/~unikorea
서강대학교(공공정책대학원 북한·통일정책학과)	gspp.sogang.ac.kr
숙명여자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riku.sookmyung.ac.kr
연세대학교(통일연구원)	suny.yonsei.ac.kr/~ikus
이화여대대학원(북한학협동과정)	home.ewha.ac.kr/~nk21
중앙대학교(민족통일연구소)	cau.ac.kr/~cauind2/ku.html
춘천교육대학교(통일교육센터)	www.tongiledu.com
한양대학교(통일정책연구소)	www.hanyang.ac.kr/code_html/H5EAJG

북한 및 통일문제 관련 방송프로그램 현황

방송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KBS 1TV	남북의 창	일 07:30~08:00
MBC TV	통일 전망대	화 13:35~14:05
EBS TV	코리아 코리아	수 20:05~20:55
KTV	통일로 미래로	화 22:00~22:50
KBS 라디오 (사회교육방송)	통일열차	월~토 00:10~1:00 (06:10~07:00 재방송)
CBS 라디오 (기독교방송)	서울에서 평양까지	월~토 21:05~21:30
PBC 라디오 (평화방송)	삼천리 우리는 하나	토 14:20~15:00
FEBC 라디오 (극동방송)	통일을 향하여	토 20:20~21:00
	남과 북이 하나되어	월~토 05:30~06:00

2007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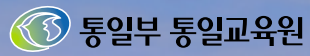
통일교육 지침서 **일 반 용**

인 쇄 일	2007년 3월 15일
발 행 일	2007년 3월 30일
발 행 처	통일부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02)901-7045 / 팩스 02)901-7082
디자인·인쇄	다해미디어

비매품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034-10



www.uniedu.go.kr